

일본 경제침체 원인 및 경제주체별 영향 분석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에 주목하여-

가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학과
2019 이다연

목 차

1. 들어가며

-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배경
- 1-2. 선행연구의 검토

2. 아베노믹스 정책의 거시적 분석

- 2-1. 아베노믹스 정의
- 2-2. 아베노믹스가 각 경제주체에 미친 영향
- 2-3. 아베노믹스 정책이 수출입에 미친 영향

3. 거시적 분석에 관한 일본 전문가의 견해

- 3-1. 제49대 일본 국회 자유민주당 중의원 아마리 아키라 (甘利明)
- 3-2. 와세다(早稻田)대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교수

4. 시사점 및 한국이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기타자료]

1. 들어가며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배경

본래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으며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에게 밀려 3위가 되었으며, 3위도 겨우 지킬 정도로 일본의 경제는 위기 속에 놓여있는 상태로 전락하였다. 일본은 오랜 버블경제를 겪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겪었다. 이러한 경제 장기불황 탈출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아베 전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가계와 정부에 미친 영향부터 시작해서 기업과 무역에 미친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21년도 기준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18.97%, 수입의존도는 15.16%이다. 2020년도 기준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12.72%, 수입의존도는 12.61%이다. 반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5.60%, 수입의존도는 33.98%이다.¹⁾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가 100퍼센트가 넘는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한국은 주변 양국에 비해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22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5대 무역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최대 수출국은 중국(133만 6,700달러), 미국(92만 6,300달러), 베트남(47만 7,400달러), 홍콩(28만 7,200달러), 일본(26만 200달러) 순이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126만 8,200달러), 미국(67만 300달러), 일본(44만 3,700달러), 호주(37만 7,700달러), 사우디아라비아(34만 9,600달러)순이다.²⁾³⁾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일본과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5대 무역국 안에 들 정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인 것은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22년 9월 기준 일본의 최대 수입국에 한국은 5위안에 속하지 않지만, 일본의 최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은 3위에 속하며 일본이 60만 4,372엔(한화 약 58만 1,676원)의 수출액을 한국으로부터 얻는다. 일본의 최대 수출국 중 3위를 차지하는데, 일본 엔의 가치가 지금처럼 계속 평가절하된다면 일본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다지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또다시 언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 목적은 일본 경제 침체를 분석하며 오랫동안 집권한 아베노믹스 정권이 미친 영향을 경제주체별로 분석 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어떻게 유지하고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비판’보다는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출처 : 통계청(KOSIS) ‘무역의존도(수출입의 대 GDP 비율)’

참고로, 일본의 2021년 무역의존도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2020년도 통계를 사용하였다.

2) 출처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3) 참고로, 미국의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 11월 6일 기준)

133만 6,700달러 - 약 18억 / 92만 6,300달러 - 약 13억 / 47만 7,400달러 - 약 6억 / 28만 7,200달러 - 약 4억 / 26만 200달러 - 약 3억 / 126만 8,200달러 - 약 17억 / 67만 300달러 - 약 9억 / 44만 3,700달러 - 약 6억, / 37만 7,700달러 - 약 5억 / 34만 9,600달러 - 4억

1-2.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 앞서, 일본이 이렇게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실이 ‘단순히 아베노믹스만이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히 엔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유가 되는 다른 배경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먼저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저서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존재한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의 ‘임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일본은 낡은 산업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별다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일본경제가 침체하는 이유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회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정보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미국 경제 전체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변화를 하며 발전을 하고 있고 일본은 변화가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점이 큰 차이이다.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산업분류’ 항목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산업 분류에는 ‘기업경영’이라는 항목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자를 특정 기업의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을 독립된 산업으로는 여기지 않는 것이다. 경영자를 특정 기업의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을 독립된 산업으로는 여기지 않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영’을 독립된 산업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은, 경영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이들이 특정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일본은 낡은 산업구조에서 변화하지 못하여 경제가 침체하였다.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이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온갖 제도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사람들 역시 회사 밖의 변화에 둔감해진 채 예전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야 하지만 결코 쉽지않고, 이를 야기한 문제가 또 하나 존재한다. 바로 퇴직금 제도이다. 퇴직금을 만기까지 채워서 받으려면 근속연수가 길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에 얽매이고 결국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4)

또다른 이유는 1990년대 후반 IT 혁명에 실패한 것이다. 1980년대까지 일본의 1인당 GDP 추이는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일본의 상대적인 지위는 하락했다. 일본의 성장률이 정점을 찍은 시점은 IT 혁명 덕분에 인터넷이 보급된 시점이다. 199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95를 발매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실현한 배경에 IT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 체계를 사용하여 눈부신 성장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예시가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는 오랜 시간 영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

4) 노구치 유키오(2022)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랩콘스튜디오, pp.116-117

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실현하지 못했고, 20세기가 되어도 농업 국가인 채 유럽에서도 가장 빈곤한 나라였다. 그러나 IT 혁명을 시작하면서 극도로 짧은 기간에 정보화를 실현했고,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디지털 덕분에 빈곤에서 탈출한 셈이다. 아일랜드는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디지털화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거대한 국가도 IT 혁명을 선도했고, 전 세계에 걸친 수평분업을 이용하여 80년대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변화가 지구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IT 혁명에서 뒤처졌다.

1990년대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는 중국의 공업화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 공업국이던 일본의 지위는 하락했다. 일본은 중국의 공업화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국가이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공업국이 큰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 했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은 고도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여 당시 침체 위기이던 제조업 대신 경제를 견인할 역할을 맡았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팽리스화가 진행되었다. 고도 서비스 산업이나 팽리스 제조업 모두 디지털에 기반하여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는 사업이므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화로 볼 수 있다. 일본도 산업구조 개혁을 진행하여 같은 식으로 변화를 실현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제조업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이를 대신하여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았고, 제조업의 팽리스화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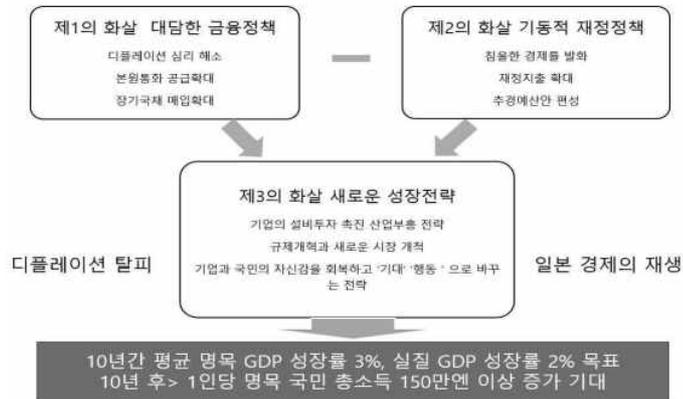
결국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경제가 침체한 원인으로는 IT 혁명에 뒤처졌고, 중국의 공업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노구치 유키오(2022)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랩콘스튜디오, pp.155-157

2. 아베노믹스 정책의 거시적 분석

2-1. 아베노믹스 정의

아베노믹스란 아베 신조와 Economics를 합쳐놓은 말로 일본의 제2차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2012~2020) 시행되었던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2013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1의 화살로 대담한 금융정책(大胆な金融政策), 제2의 화살로 기민한 재정정책(機動的な財政政策), 제3의 화살로 장기적 경제성장정책(成長戦略)의 세 개의 화살(三本の矢)이라는 3대 주요 정책을 토대로 오랜 시간동안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림 1>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정책⁶⁾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베 정권은 통화 공급에서 시작해서 그를 통한 많은 기대효과를 기대하며 정책을 펼쳤다. 최종 목표인 제3의 화살은 기업과 국민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를 제창하며 정책의 목표로 명목 GDP 3% 성장, 물가상승률 2% 증가,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선순환경제 창출 등의 매니페스토(Manifesto)⁷⁾를 제시하였다. 정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일본은행의 운전기⁸⁾를 무제한으로 돌리겠다는 아베총리의 발언에서, 일본에서 오랜 기간 지속중인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기회복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의 적극적인 전개에 대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⁹⁾ 하지만 그럼에도, 아베노믹스가 종료된 현시점에서는 부정적인 해석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베노믹스가 정책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6) 송정현(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권,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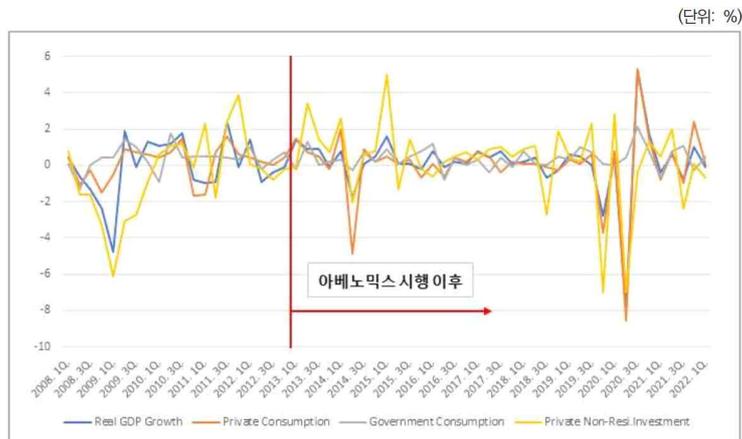
7) 매니페스토(Manifesto) : 20세기 들어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새로운 예술 운동들이 그 운동의 정신과 의도를 밝히는 글을 이르는 말. 이탈리아어로 ‘선언’이라는 의미.

8) 운전기 : 인쇄기의 하나. 원통형의 판면과 이와 접촉하면서 회전하는 인압 원통 사이에 등글게 감은 인쇄용지를 끼워 인쇄한다. 한 번에 양면을 인쇄하므로 신문, 잡지 따위와 같이 많은 양을 인쇄할 때 쓴다.

9) 송정현(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권, pp. 64-66

2-2. 아베노믹스 성과¹⁰⁾

먼저 경제지표를 통하여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림 2>는 일본의 2008-2022년의 실질 GDP, 개인소비, 정부소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우선 2008-2022년의 기간 동안 2%의 성장률을 달성한 기간은 2020년 3분기(5.3%) 단 한 차례였으며, 이마저도 2020년 2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7.9%의 감소를 보인 직후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을 뿐이다. 아베노믹스 시행 직후 실질 GDP는 1.4%의 성장을 보였으며, 2013년 3분기까지 1% 내외의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 4분기 -0.1%의 감소를 보였고, 2014년 2분기에는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인해(5%→8%) -1.8%의 감소를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일본의 실질 GDP는 2015년 1분기(1.6%)를 제외하고는 -1%~1%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4분기는 -2.8%, 2020년 2분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7.9%의 감소를 보였다.



<그림 2>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¹¹⁾

위의 <그림 2> 자료를 보면 추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파란색 그래프는 실질 GDP, 주황색은 개인소비, 회색은 정부소비, 노란색은 개인투자를 나타낸다. 한눈에 봐도 2014년에는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개인소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요소에서 큰 하락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에 개인소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감소 이후 급격한 상승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10) 송정현(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권, p.68-74

11) 송정현(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권, p.69

다음으로는 가계·기업·정부 경제주체 별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계부터 살펴볼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소비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비 확대로 인하여 기업 실적의 개선 및 기업 설비투자로 이어져 다시 임금인상 및 소비 증대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고용 확대와 임금상승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임금상승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은 2012-2019년의 실질임금지수 및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아베노믹스 정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실질임금 증가를 통한 가계소비 증가가 발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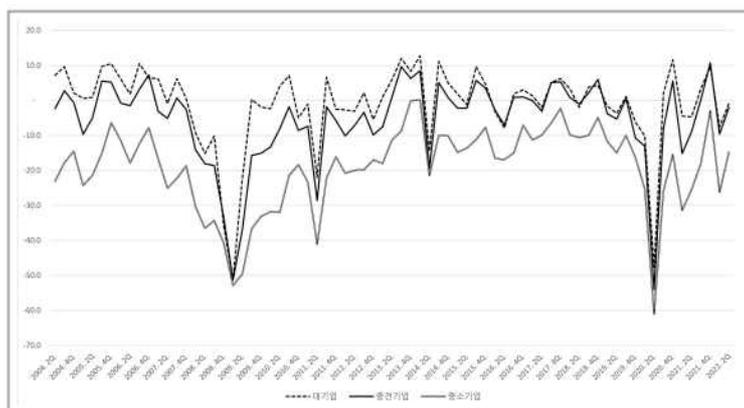
<그림 3> 실질임금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¹²⁾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3년 103.9였던 실질임금지수는 2014년 100.9 2015년 100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2018년 기간동안 근소한 등락을 반복하다 2020년 98.6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소비자 물가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96.2에서 2013년 96.6, 2014년 99.2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99.9로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20년 10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7년 100.5로 실질임금지수를 추월한 후 2020년까지 실질임금지수-소비자물가지수간 격차가 벌어졌다. 즉 아베노믹스가 추구하였던 실질임금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물가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계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12) 송정현(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권, p.70

다음은 기업에 미친 영향이다. 아베노믹스 제1의 화살인 양적완화 정책의 엔저 유도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엔화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수출품의 달러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본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었다. 1994년 경단련¹³⁾은 급격한 엔고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0년에도 엔고 및 주가 하락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고용 침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가 기업의 긍정적 경기예측을 유도했는지,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증대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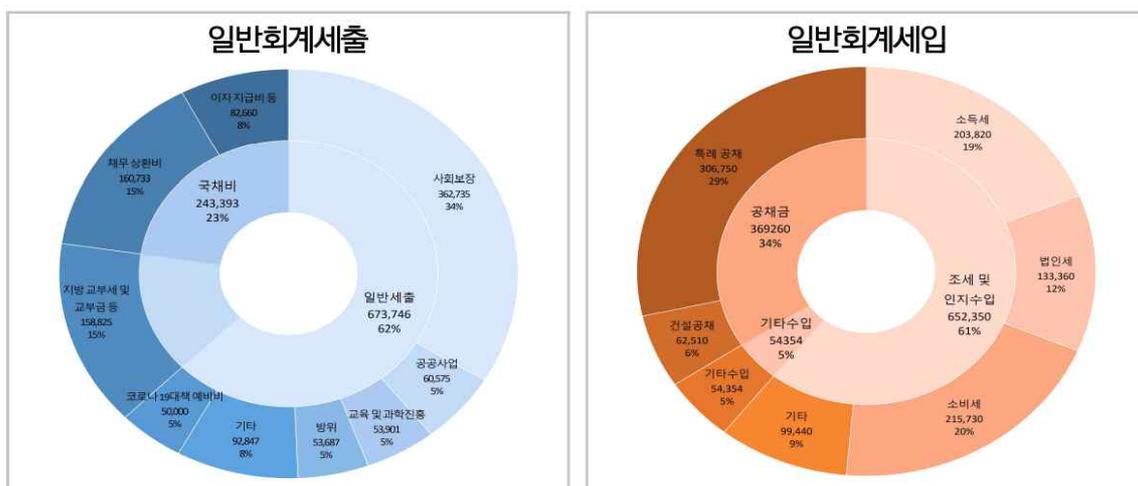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는 기업의 경기예측지수(BSI)로, 기업이 느끼는 향후 경제전망을 수치화시킨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으로 경기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면 BSI 지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우선 대기업을의 경기예측지수는 2014년 소비세 인상, 2019-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유리한 대기업의 경우 아베노믹스 정책의 수혜를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황이 달랐다. 중견기업의 경우 2013년 2분기-2014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4년 1분기의 경우 8.5%p의 증가를 보이며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 2분기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인해 -19.5%p를 기록하였다. 중견기업의 경기예측지수는 2020년 2분기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2분기 -54.3%p를 기록하였다. 일시적이거나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나타난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 1분기 0.1%p의 증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4-2022년까지 경기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14년 2분기 경기예측지수는 -21.5%p 감소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대기업(-14.6%p), 중견기업(-19.5%p)에 비해 소비세 인상의 타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기업 경기예측 추이¹⁴⁾

13)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의 출입말'

마지막으로 정부에 미친 영향이다. 아래의 <그림 5>는 2022년 일본정부의 일반회계 세출과 일반회계 세입의 구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우선 세출의 경우 총 107조 5964억 엔으로 크게 일반세출(67조 3,746억 엔, 62%), 지방교부세·교부금(15조 8,825억 엔, 15%), 국채비(24조 3,393억 엔, 23%)로 나눌 수 있다. 일반세출은 사회보장, 공공사업, 방위 등에 사용되는 세출이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일본 전역의 인프라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채비이다. 국채비는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한 경비로, 2022년 24조 3393억 엔에 달하며 비율은 약 23%에 이른다. 국가지출의 약 1/5이 오로지 국채를 갚고 이자를 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세입의 경우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이며 조세 및 인지도입(65조 2,350억 엔, 61%), 기타수입(5조 4,354억 엔, 5%), 공채금(36조 9,260억 엔, 34%)로 나뉜다. 즉 일본 정부는 현재 세입의 1/3이 국채를 통해 발생 되고, 세출의 1/4을 국채를 갚는데 사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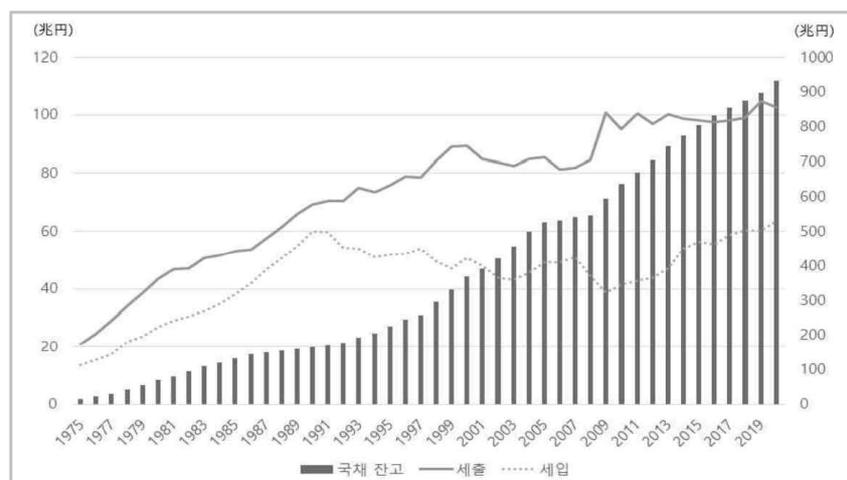


<그림 5> 2022년도 일본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세출·세입 구성 (단위 : 억엔)¹⁵⁾

14) 송정현 (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권, p.71

15) 송정현 (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권, p.72

아래의 <그림 6>은 세출·세입 및 국채 잔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1975년 일본의 국채 잔고는 15조 엔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후 1990년 국채 잔고는 166조 엔, 세출은 69.3조 엔, 세입은 60.1조 엔으로 세입은 약 4.5배 증가하였지만, 국채 잔고는 10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1991년 버블경제 붕괴 후 세수마저 감소세를 보였으며, 세수의 감소세는 2009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동안 세입과 세출의 간극이 벌어졌으며 그 간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메꿔졌다. 결국 아베노믹스 실시 직전이었던 2011년도 정부부채 잔고는 670조엔에 달하게 되었으며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의 세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00.2조 엔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14년 98.8조 엔, 2015년 98.2조 엔으로 약 100조엔의 세출이 발생하였다. 반면 2013년의 세입은 47조 엔으로 세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자누적 및 세입 부족 현상의 지속은 정부로 하여금 세수를 늘리도록 유도하였고, 2014년 소비세 인상을 시행하게 된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2014년부터 세입은 54조엔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60,4조엔, 2021년 63.9조엔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동기간 세출 역시 증가하였고, 국채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2021년에는 1,004조엔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GDP 대비 국채 누적 비율은 2006년 174%에서 2021년 256.9%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6> 세출·세입 및 국채 잔고 추이¹⁶⁾

16) 송정현 (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권, p.73

2-3. 아베노믹스 정책이 수출입에 미친 영향¹⁷⁾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가 산업별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우선 정리해 볼 것이다. 먼저 전반적으로 수출증감률이 수입증감률보다 낮아 무역흑자 감소 압력이 증대해진다. 단, 기계/가전은 각각 일본제품과 한국제품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영향이 미약하다.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감소 혹은 증가율 둔화 압력을 받고, 또한 수입국 입장에서는, 소비재 품목 수입은 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 물량 증가 효과로 총수입이 증가한다. 중간재 수입은 수출 침체에 따른 수입 유발 효과 축소로 총수입이 감소한다. 단, 석유화학은 국가 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수입선 대체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아래의 <표 1>을 보며 품목별로 분석을 더욱 자세히 해볼 것이다.

		수출증감률	수입증감률	무역수지 증감
총수출입		-2.6%	-2.5%	15억불↓
중간재 (자본재)	철 강	-11.9%	-4.9%	29억불↓
	기 계	-1.7%	-11.6%	33억불↑
	석유화학	-0.2%	9.2%	15억불↓
	I T	-1.8%	-0.7%	16억불↓
소비재	자동차	1.0%	7.4%	1억불↑
	가 전	5.6%	0.3%	7억불↑

<표 1>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 100 엔(연평균 20% 절하)시
주요 품목의 수출입 영향¹⁸⁾(단, 증감률 및 무역수지 증감은 2012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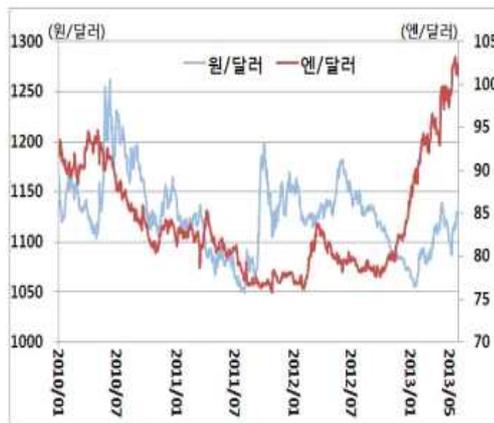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감소 압력이 존재한다. 주요 산업별로 엔/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국내 철강, 기계, IT 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 엔일 경우 철강(-11.9%), IT(-1.8%), 기계(-1.7%)의 순서로 수출 감소 압력이 존재한다. 철강, 기계, IT, 기계 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산 제품과 일본산 제품의 수출경합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 가전 등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 엔일 경우 자동차(+1.0%), 가전(+5.6%)로 다른 주력 수출 품목에 비해 엔저에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한국 기업에 비해 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진출 시기도 빨라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 비중이 절대적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엔저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동차 제품 가격경쟁력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가전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일본을 넘어서 있어 환율 변동의 영향보다는 경기 변동이나 한국제품 수요에 대한 추세적 상승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을

17) 김주현(2013) 「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소비재보다 중간재 타격이 더 크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528호, pp.i-5

18) 김주현(2013) 「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소비재보다 중간재 타격이 더 크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528호, p. i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비재 품목 수입은 단가하락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효과로 총 수입이 증가한다.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재 품목 수입은 엔/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 하락으로 국내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 엔으로 상승 시 소비재 수입 중 자동차(+7.4%), 가전(+0.3%)의 수입 증대 효과가 전망된다. 이는 자동차, 가전 산업의 경우 수입물량 증가의 영향이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보다 크게 작용함에 따라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동차, 가전은 수출 부문에서 엔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국내 수입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부분 중간재 수입은 수출침체에 따른 수입 유발 효과 축소로 수입이 감소한다. 국내 기업들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경우 수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유발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 엔으로 상승하면 중간재 수입 중 기계(-11.6%), 철강(-4.9%), IT(-0.7%)의 수입 감소 압력이 발생한다. IT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중간재와 휴대폰 등의 소비재가 혼재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간재로 분류한다. 기계 산업은 자본재적 특성으로 환율보다 국내 투자 등 경기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최근 국내 설비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 수출의 수입 유발효과가 높은 가운데 수출경기 침체로 중간재 수입이 위축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단, 석유 화학은 국가 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수입선 대체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수입액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시작된 아베 노믹스의 영향으로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지난 2012년 1월 평균 엔/달러 환율인 77엔에 비해 2013년 1월 평균 환율(89엔)은 13.5%, 2013년 5월 31일 기준 환율(101엔)은 23.8% 절하되었다. 반면 한국 원화의 경우 그 당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이다. 원/달러 환율은 2011년 하반기부터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1,506원(2013년 1월 16일)까지 하락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다시 1,128원(2013년 5월 31일)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46원에 비해 2013년 1월 평균 환율(1,065원)은 7.6% 절상, 2013년 5월 31일 환율(1,128원)은 1.6% 절상되어 가치가 하락한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었다. 아래의 <그림 7>을 표면 환율 변화를 설명한 바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은 원/달러의 절상, 절하율과 엔/달러의 절상, 절하율을 비교한 표로, 한눈에 봐도 엔/달러의 평가절하율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¹⁹⁾ <그림 8> 원화 및 엔화의 달러 대비 절상, 절하율²⁰⁾
(2012년 1월 평균 기준으로 산출)

19) 김주현(2013) 「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소비재보다 중간재 타격이 더 크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528호, p. 1
20) 김주현(2013), 「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소비재보다 중간재 타격이 더 크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528호, p. 1

본격적으로 엔저로 인한 엔/달러 환율 변동이 총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해 볼 것이다. 엔저로 국내 수출증감률이 수입증감률보다 낮게 형성되어 무역흑자 감소 압력이 늘어나고, 2013년 엔/달러 환율 100엔일 경우 15억 달러의 무역흑자 감소 압력이 발생한다. 총수출 측면부터 살펴보면,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로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 시 국내 총수출은 -2.6%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엔저 현상 지속으로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 총수출은 약 5,334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할 전망으로 보였다. 엔저 현상 심화로 엔/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연평균 110엔 및 120엔에 달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각각 5,202억 달러(-5.2%), 5,080억 달러(-7.3%)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수입 측면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 시 약 -2.5% 국내 총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 총수입은 5,0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할 전망이다.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10엔일 경우 국내 총수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5,019억 달러, 120엔일 경우 -4.2% 감소한 4,980억 달러로 전망되었다.

전체 무역수지를 정리해보면, 엔저 현상 심화는 수출보다 수입을 크게 감소시켜 2013년 무역 수지가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2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억 달러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래의 표2는 위의 설명들은 한눈에 정리해둔 표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단위: 억 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00엔 (20.2%)	5,334 (-2.6%)	5,066 (-2.5%)	268 (-15억)
110엔 (27.4%)	5,202 (-5.1%)	5,019 (-3.4%)	183 (-100억)
120엔 (33.5%)	5,080 (-7.3%)	4,980 (-4.2%)	100 (-182억)

<표 2> 엔/달러 환율에 따른 2013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망²¹⁾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1) 엔/달러 환율 괄호는 2012년 평균 79.8엔 대비 2013년 평균 100엔, 110엔, 120엔 절하율
- 2) 원/달러 환율은 1,100원으로 가정
- 3) 무역수지 괄호는 2012년 무역수지(283억 달러)대비 변동폭을 의미

21) 김주현(2013) 「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소비재보다 중간재 타격이 더 크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528호, p. 3

2022년 기준 현재의 일본 무역적자도 함께 살펴보겠다. 일본은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영향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대러시아 제제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이 20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4~9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1조 75억 엔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상반기 총 수입액은 60조 5837억 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4.5% 늘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로 수입액이 커졌다. 원유와 LNG 등이 속한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배인 17조 7145억 엔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원유 수입 단가는 1킬로리터당 9만 3106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8% 올랐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49조 5762억 엔을 기록했다. 미국에 자동차, 아시아에 철강 등을 많이 수출했다.²²⁾

22) 인터넷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21020101750458>
“엔저에 일본 상반기 무역적자 11조 엔...사상 최대”

3. 거시적 분석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3-1. 제49대 일본 국회 자유민주당 중의원 아마리 아키라 (甘利明)

이창민(2019)²³⁾에서는 현 일본 국회 자유민주당 중의원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가 무역에 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 견해를 볼 수 있었다.

아마리 아키라는 엔저 속에서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신흥국경제의 부진으로 수출이 늘지 않는 점, 많은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점, 엔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중에서 신흥국경제의 부진은 동일본대지진, 원유가격의 급등과 같은 외생적 충격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변화보다 수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①현지생산 거점의 증가와 ②환율의 수출가격 영향력 감소는 일시적 충격이 아닌 수출구조의 변화 내지는 기업행동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은 ‘수입금액 확대와 함께 수입수량이 축소’되는 효과를, ②는 ‘현지판매가격의 인하와 함께 수출수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상쇄하여, 결국 엔저에도 무역수지의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엔저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환율의 변화가 무역재의 가격변화에 반영되는 정도(전가율)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엔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은 환율이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엔의 가치가 하락하면 시차를 두고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량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전가율이 낮으면 엔저에도 불구하고 달러표시 수출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데,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전가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엔저에도 불구하고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그 결과 엔화 환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은 환차익에 해당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동일본대지진, 원유가격 급등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 때문이기도 하고, 무역재의 가격을 융통성있게 조절하지 못한 점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23) 이창민(2019)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변화」, 『비교일본학』 제47집, pp.53-54

3-2. 와세다(早稻田)대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교수²⁴⁾

중앙일보의 한 기사에서 와세다대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와 엔화 가치에 관한 심도있는 인터뷰를 볼 수 있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의 엔화 가치에 관한 견해와 예측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후카가와 교수는 최근의 엔화 가치 급락에 대해 “일본의 국가재정은 다 소진됐고, 부채가 많아 장기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다.” 며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1065조엔(약 1경 560조엔)으로,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2025년 기준으로 3조 7000억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일본도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상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딜레마의 연속으로 보인다.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에 후카가와 교수는, “일시적으로 달러당 150엔까지도 갈 거 같다. 하지만 150엔까지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외화가 많아도 헤지펀드와 싸우다 외화를 다 써버리면 외환위기로 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락을 지켜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막연한 상태이지만, 더 큰 외환위기로 변질을 것을 막으려면 우선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을텐데 ”150엔까지는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160엔, 170엔이 되면 정부가 당연히 뭔가를 할 것이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160엔, 170엔까지 간다는 관측은 사실 많지 않다. 환율이 금리차 만으로 움직이는데 아니고 물가 영향도 있는데, 일본의 물가상승 속도는 느린 편이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일본 물가는 한국보다 많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본 장기거주자의 말에 따르면 2010년도 초반에도 일본 물가가 한국인이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비싸진 않았다는 말이 있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엔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태면 일본이 수입해 오는 물품의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원칙인데 일본의 현재 물가는 비싼 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확인 가능하다.

그래도 “경제 전체로 보면, 엔고(高)보단 엔저가 도움이 된다. 요즘 관광업계는 호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성장세가 주춤한 일본경제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역시 크게 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긴축에 대한 우려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은 내수시장이 견고해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도 아니라.”라고 하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일본 기업, 무역의 현 특성을 설명한 바이다.

엔저 정책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유추에, “과거 엔저 정책은 이유 없는 엔고(高)를 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나치게

24) 인터넷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083>

“달러당 150 엔까지 하락 예상...일본, 빚 많아 손 쓸 방법 없어”

엔화 가치가 낮아 에너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국제유가가 치솟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담이 곱절이 됐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 정책인 ‘아베노믹스’(아베+이코노믹스)의 대표 인물인 건 맞지만 합리적인 수단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엔저를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엔저를) 지켜보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금리가 싸기 때문에 해외 자본 유치나 일본 기업의 국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애초 엔저 정책의 의도했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마침 현재 엔저 영향으로 일본 관광의 수요가 많은 것이 조금이나마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원화 가치 하락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부채의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자산이 많다. 그러나 원화 가치 하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나치게 외환위기 때 기억을 소환하는 것 같다.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다. 미국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전혀 생각이 없을 거다. 2008년에는 미국이 힘들었던 때여서 통화스와프를 해준 측면이 있다. 요즘은 ‘미국만 살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하고만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도 없다.”고 하였다. ‘미국만 살면 된다’는 인식이 현재 일본과 한국의 환율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한국 환율도 8월 말만 해도 1달러 당 1,350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4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보아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 한국경제에 대한 견해도 함께 분석해 보겠다. 한국경제가 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다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그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가계 부채 중 상당히 많은 물량이 부실채권이 될 것이고, 재정적으로 한국의 빚이 일본만큼 불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도 한국은 재정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어 일본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점이 부동산 가격이 빠지지 않게 하고, 한국경제가 위기로 가지 않게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현재 상황에서 양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견해도 볼 수 있었다. “아시아 내 자유무역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시작됐다. 아시아 내 자유무역체계를 이용해서 반도체·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장난감·옷 등 내수재로 품목을 넓혀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자유무역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게 한·중·일이 역할을 할 때다.”라고 하였다. 세계무역기구가 존재하듯이 아시아 내 자유무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협정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4. 시사점 및 한국이 나아갈 방향

본 연구를 통해 아베노믹스가 경제주체별로 미친 영향도 분석해 보았고,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일본 국내의 경제주체에 미친 영향은 일본 현지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다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수출입은 외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바이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별로 미친 영향,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다. 우선 오랜기간동안 경제 침체가 진행되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장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엔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와 외환 리스크 관리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화를 추진해야한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제품이 있으므로, 이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현황을 통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면, 한국도 언제 닥칠 지 모르는 환율 위기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쟁력을 갖추둔 상태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영향이 크게 되면 유동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며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리 아키라 교수의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역재의 전가율을 반영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입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제침체 원인 중에 낡은 산업구조도 있었는데, 한국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지금처럼 산업구조의 최신화와 개방적, 진보적인 기업 운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환율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극단적인 통화량 증가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통화량 증가는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놓여 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는 시행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기한과 양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마저도 긴 경제 침체기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에 놓이게 되면 일시적인 정책을 사용하거나, 점차적으로 늘리는 등 향후 미래까지 내다보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주현(2013) 「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소비재보다 중간재 타격이 더 크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528 호, pp. i-5

노구치 유키오(2022)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랩콘 스튜디오, pp. 116-117, 155-157

송정현(202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학보』 제 132 권, pp. 63-77

이창민(2019)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변화」, 『비교일본학』 제 47 집, pp. 43-46

[기타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083>

-달러당 150 엔까지 하락 예상...일본, 빗 많아 손 쓸 방법 없어

<https://www.ajunews.com/view/20221020101750458>

-엔저에 일본 상반기 무역적자 11 조 엔...사상 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056352>

-중국, 일본 제치고 '세계 2 위 경제대국' 등극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220925164415485789

-3 등도 위태로운 일본